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6-10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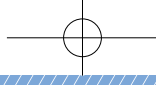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 부패영향평가사례집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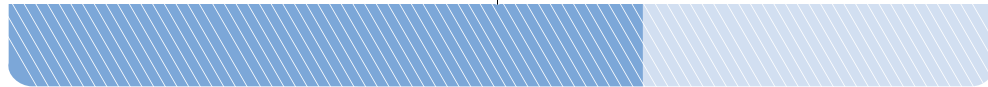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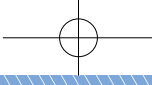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이다 (廉者, 天下之大賣也).”  
라고 한 다산(茶山)의 말씀이 글로벌 경쟁시대인 오늘날  
새삼 되새겨질 정도로 국가의 청렴도 제고는 한 국가  
내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외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패문제의 해결은 부패를 비윤리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위로서 적발과 처벌보다는 법·제도상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자체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  
법령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제도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안 1,593개를  
평가하고 50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 개선이 시급한 건설과 재정분야 22개의  
현행법령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지원과정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등 10개의 개선안을 권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경쟁력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를 독려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공개유도 및 공개관리규정의 제도화, 그리고 사규 제·개정 예고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2012년도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개선사례를 부처별이 아닌 업무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반영된 조문 내용을 별도로 수록하여 부패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각 기관 실무자들의 사례집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각급기관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 목 차

##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7

## 제2장 제 · 개정법령 평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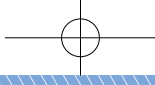
27

###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 29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3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9
3. 특해발생가능성 ..... 45
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50
5.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 55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60
7. 접근성과 공개성 ..... 66
8. 예측가능성 ..... 70
9. 이해충돌가능성 ..... 77

### 제2절 업무유형별 평가사례 ..... 83

1. 부담 · 환급 ..... 84
2. 지원 · 보상 ..... 101
3. 위임 · 위탁 · 대행 ..... 123
4. 심사 · 심의 ..... 135
5. 지정 ..... 154
6. 제재 ..... 169
7. 재산관리 · 처분 ..... 191
8. 단속 · 조사 ..... 206
9. 보수 ..... 212



##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3절 자주 지적된 개선사례.....	217
1. 과태료 부과기준 .....	219
2.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	236
3. 취소처분 부과기준.....	242
4.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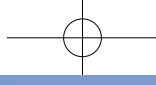
### 제3장 현행법령 평가사례 253

제1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 · 투명성 제고.....	255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	279
제3절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	293
제4절 각급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307

### 제4장 자발적 개선사례 311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	313
제2절 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	345
1. 광역자치단체 .....	346
2. 기초자치단체 .....	379
3. 교육자치단체 .....	394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	405
1.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총평 .....	406
2.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 · 개정 예고제 추진.....	408
3.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	414

### 부록 참고의견, 색인 447



##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이 사례집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통보된 부패영향평가 개선사례 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소관부처의 표기는 통보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제1장

---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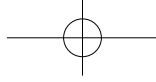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2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는 법령 등의 입법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것이고,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법적 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필요성

-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1. 준수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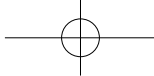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 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실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 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 · 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 · 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 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 ·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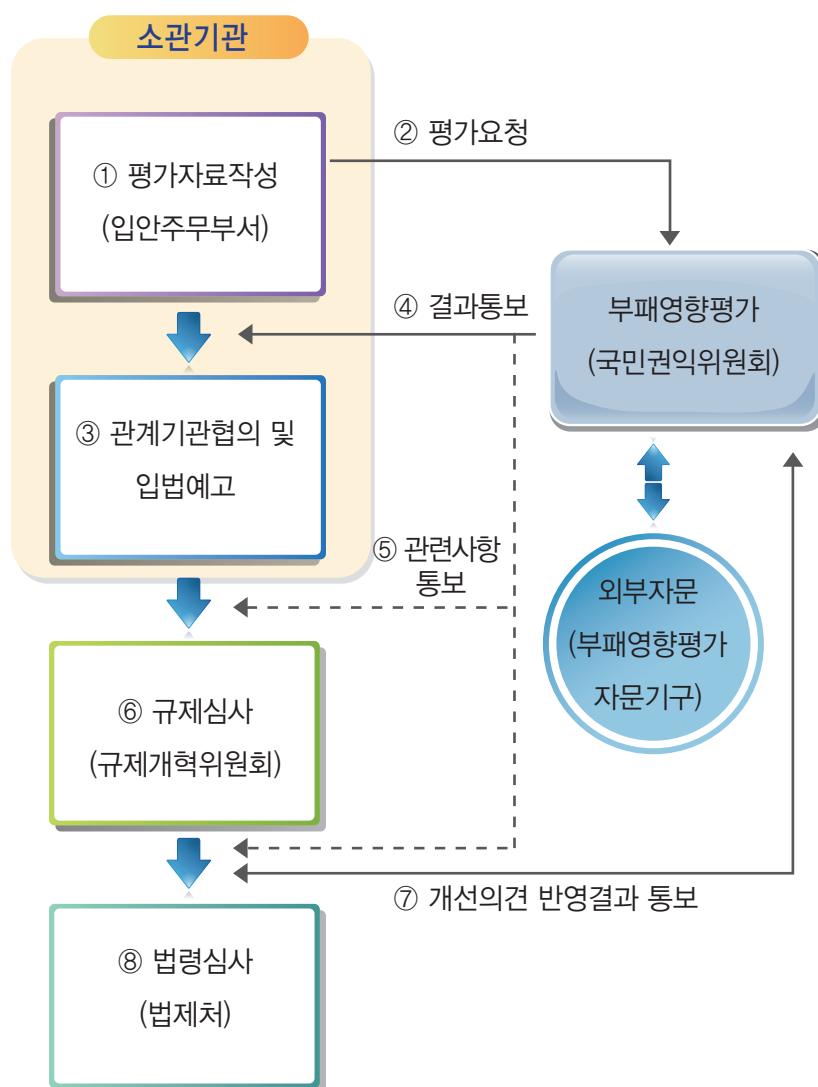
##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제3절 제·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절차

- 각 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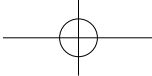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법령 등
  -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592(2011.5.18.)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 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32)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  
(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영 제30조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영 제32조제1항)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영 제32조제2항)

###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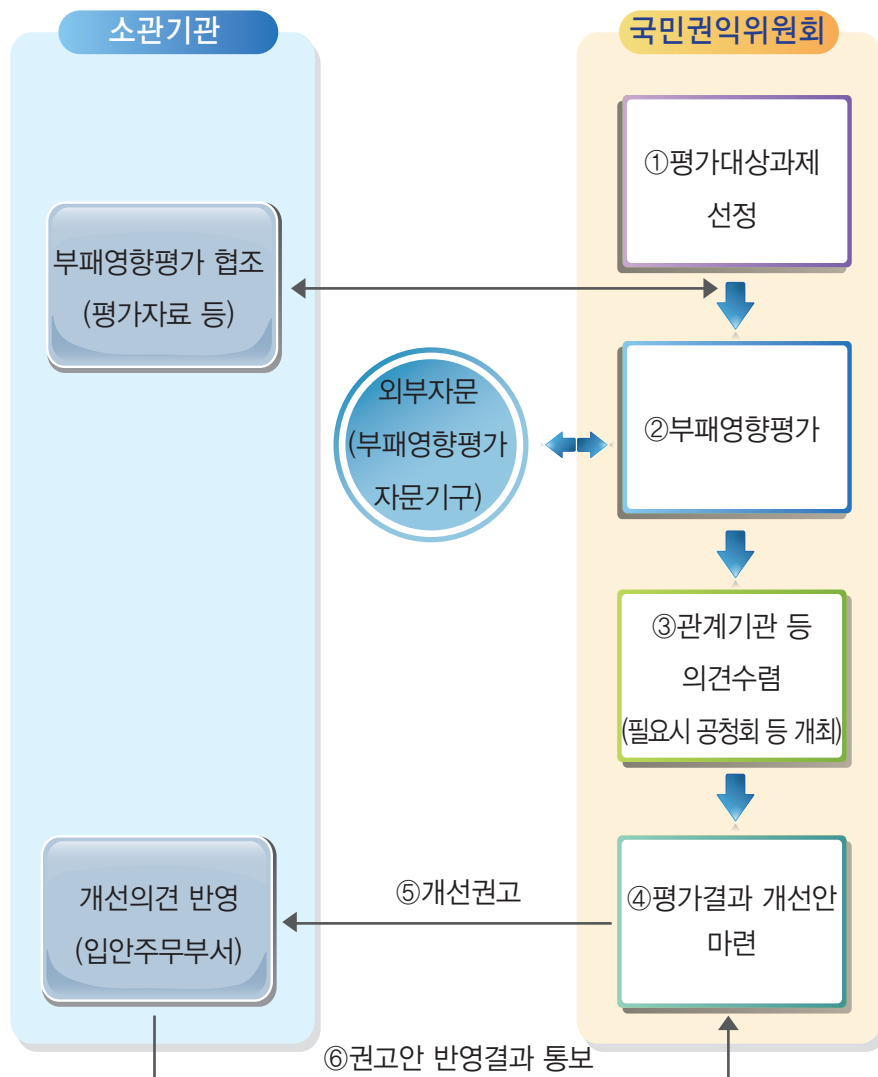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5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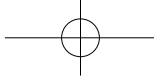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 제4절 현행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절차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통보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제·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부정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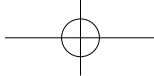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법 제29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법 제29조제4항)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4항)



###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영제30조제5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 제5절

# ‘12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 1. 평가대상법령 선정

‘12년도에는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 제고, 지방토착비리를 근절하면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평가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총 1,593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92개의 법령안에서 508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4.9%로서 전년도 대비 1.6%p 상승되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지방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 개선이 시급한 건설과 재정분야의 24개 현행법령을 평가하여 10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평가기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 중 대부분의 기관(93.7%)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 역시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82%)하면서 사규의 제·개정 예고시스템 구축(81.3%)하여 자율평가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현행법령의 평가는 지방행정에 국한되어 있어 민생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과제가 부패와의 연관성 및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치법규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12년도에는 위원회 직원들의 평가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평가업무 매뉴얼인 “부패영향평가제도 이해와 활용”을 발간하여 평가시 활용하도록 하면서 정기적인 오아시스 운영을 통하여 평가사례의 공유 및 법령이론의 습득 등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12년도에는 총 192개 법령안에서 50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4.9%로, 전년도 대비 1.6%p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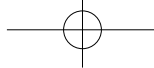
###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593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1,401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92개의 법령안에서 50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2.1.1~12.31) 》

접 수	평가결과 통보			수용률 (전년도대비)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593개 법령	1,401개 법령	192개 법령	508건	94.9%(↑ 1.6%p)

※ '11년도 수용률 : 93.3%



## 나.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법령별(192개)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68개, 35.4%), 환경·보건 관련 법령(44개, 22.9%)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았으며, 개선권고건수(508건) 중 48.4%(246건)가 산업·개발 관련 법령에서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2.1.1. ~ 12.31.) 》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개선권고 법령개수	192	30	30	3	6	68	5	44	4	2
개선권고 건수	508	69	82	6	11	246	10	74	8	2

## 다.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항목별로는 3개의 평가영역 중 행정절차의 투명성(325건, 63.9%)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9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이해충돌 가능성(225건, 44.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86건, 16.9%), 접근성과 공개성(81건, 15.9%)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192개 법령 508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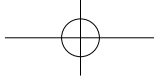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평가기준		개선 건수
준수의 용이성 (64건)	준수부담의 적정성	8
	제재규정의 적정성	46
	특혜발생 가능성	10
집행기준의 적정성 (119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86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8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5
행정절차의 투명성 (325건)	접근성과 공개성	81
	예측 가능성	19
	이해충돌 가능성	225
합 계		508

## 라. 개선권고 유형 현황

개선권고 유형은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225건, 44.2%), 접근성과 공개성의 확대(73건, 14.3%), 당해법령의 구체화(70건, 13.7%), 재량범위 축소 및 제한(28건, 5.5%), 제재규정의 적정화(21건, 4.1%) 순으로 나타났다.

《 개선권고 유형 (192개 법령 508건) 》

개선권고 내용	평가 건수
당해법령 구체화	70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22
부담 완화 · 축소	5
제재규정의 적정화	21
특혜 제거 · 축소	8
재량범위 축소 · 제한	28
위임 · 위탁 기준의 적정화	10
재정 지원기준의 명확화	6
접근성 · 공개성 확대	73
예측가능성 제고	13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225
기타 삭제 · 폐지 · 수정 · 보완 · 신설 · 도입	27
합 계	508



###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동향분석 스크랩, 제·개정 법령의 이력관리제 등 현행법령 평가과제 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대상 분야를 설정하였다.

‘12년도에는 지방토착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고,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지방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 개선이 시급한 건설과 재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3개의 과제(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을 일괄정비 추진함으로써 행정기관 내부의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특성상 하도급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수직적인 계약관계로서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불투명, 저가·이중계약을 통한 비자금 마련 등 건설업자 등의 각종 불공정 행위로 부패사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규정 마련,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합리화 등 4개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과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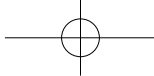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재난예방, 농어촌 발전 등 특수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자금을 과도하게 융자하는 등의 재정운영으로 기금사업기반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기금사업기반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지방기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조금 관리조례」,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5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강화,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강화 등 3개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지방선거가 과열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단체 등에 특혜성·선심성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는 보조금의 횡령·편취, 중복 수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지원과정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 3개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동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

행정기관 의사결정의 의결·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데, 최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개별법령에서 설치된 43개 위원회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 도입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일괄하여 정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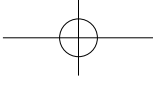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 4.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법령과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평가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많은 부패유발요인들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도 많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므로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2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실무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자율평가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배포, 실무자에 대한 평가기법 교육실시,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운영, 자율평가기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를 하였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개 기초자치단체(인구 50만 이상),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반부패경쟁력평가결과,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30개 기관)에서 조례·규칙 등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1개 기관(48%)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 명문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법규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는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1개 기관 평균 7.3건,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1개 기관 평균 4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개 기관 평균 2.6건의 개선과제를 각각 발굴하였으나, 개선과제로 제출한 내용이 부패와의 연관성 및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향후 개선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의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것도 있어 법령과 유사하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제·개정되거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보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사규공개관리규정의 제도화, 사규의 공개유도, 사규 제·개정 예고 실시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반부패경쟁력 평가대상 145개 공직유관단체 중 119개 기관(82%)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 하였고, 사규집을 기준으로 105개 기관(72.4%)이 90% 이상, 15개 기관(10.3%)이 70% 이상의 사규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118개 기관(81.3%)에서 사규의 제·개정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사규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는 125개 기관에서 59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였고, 개선과제는 전년도에 비해 부패와의 연관성이나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등 질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다.